

主 題

## 지역정보화의 현상과 대응

한국정보문화센터 사업개발부 신 광 우, 최 두 진

차 례

1. 지역정보화의 이해
2. 국내의 지역정보화 흐름
3. 자치단체의 정보화 노력
4. 지역정보화 발전방향
5. 제 언

최근 동아일보사와 한국전산원에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보화 수준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이 평가는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의 수준을 평가한 것으로 '정보화평가'라는 단어자체로서의 의미만으로도 많은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한지 불과 10여년도 지나지 않은 기간 동안에 지방에서의 정보화 추진성도가 평가의 대상이 될 만큼 성장 발전하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러나 평가결과가 말해주듯이 정보인프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미흡하다든지, 수도권과 지방,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의 정보화격차가 현저히 나타나는 것을 볼때 지역경쟁력강화와 균형발전이라는 지역정보화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1]에서 알 수 있듯이 PC 보급이나 네트워크 구성 등 하드웨어 부분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

으나, 통신망을 이용한 자치단체간의 자료교환이 10% 수준에 머물고 있다든지, e-mail id의 보급율이 전체 공무원의 64%정도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은 아직도 정보화 활용율이 저조하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나타내주는 것이라 하겠다.

### 1. 지역정보화의 이해

지역정보화는 "정보화의 축이 중앙중심에서 지역 개념으로 확산된 것으로서 지역의 고유한 정보를(지역 특화DB), 지역주민이나 지역기관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만들고(지역에서 DB생산), 스스로 운영 주체가 되어 정보를 발신함으로써(지역에서 시스템 운영) 주민의 행정편의나 생활편의를 도모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종전까지 국가전체의 획일적인 구도하에서 이루어져 오던 국가발전전략에서 벗어나 지역이나 도시가 글로벌 네트워크사회에

구 분	내 용	정보화순위
정보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 1인당 PC 보유대수 : 0.9대</li> <li>○ 네트워크 연결 PC : 0.73대</li> <li>○ PC대비 워드프로세서 : 1.16개</li> </ul>	1위 : 서울 2위 : 인천 3위 : 부산 4위 : 경남 5위 : 경기 6위 : 충남 7위 : 전북 전남
정보활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계시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지역 13, -미사용지역 3</li> <li>등록건수 1주일 평균 217건</li> </ul> </li> <li>○ 전자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지역 10, -미사용지역 6</li> <li>전자결재 비율 : 30%</li> </ul> </li> <li>○ e-mail id 보유 : 전체 공무원 중 64%</li> <li>○ 인터넷 이용시간(1일) : 3.5시간</li> <li>○ 통신망을 이용한 자치단체간 자료교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자료의 10%</li> </ul> </li> </ul>	
정보화 격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예산 대비 정보화예산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개 광역시 0.7%, -9개 도 0.4%</li> </ul> </li> <li>○ 네트워크 회선수(1인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고 5.5회선, -최저 0.4회선</li> </ul> </li> <li>○ PC 보유대수(1인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고 1.8대, -최저 0.4대</li> </ul> </li> </ul>	

표 1.1 자치단체의 정보통신인프라 수준 및 활용도

\* 동아일보 99. 6. 28일자 8-9면 참조하여 재구성

서 하나의 경제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표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경제·사회의 운영범위를 세계로 확장하는 추세하에서 작은 지방도시의 역할을 확장하는 현상으로, '큰 것이 작은 것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주체도 큰 주체와 얼마든지 동등하게 활동할 수 있는 현상' (Naisbitt, J. 1994)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유럽에서의 지역정보화 역사를 살표봄으로써 지역정보화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다.

유럽에서 최초의 지역정보화는 스웨덴의 텔레카

티지(Telecottage)설립 운동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 스웨덴 농촌지역의 주요문제는 학교, 병원, 직장 등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대부분 도시지역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 적은 관계로 농촌지역에서 고등교육을 필요로 하는 몇몇 직종들은 지역 외부의 사람들로 부터 조달하고 있었다. 1985년 몇몇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 내용은 농촌지역을 발전시키는데 새로운 정보기술을 사용하고 거기서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었다.<sup>1)</sup> 그래서 1985년 최초의 telecottage가 스웨덴의 Vemdalen에 설립되었는데 그 목적은 첫째, 정보통신 설비를 이용한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서비스 증진 둘째, 지역주민들과

1) Susanne Sloth Larsen, B.A 'Presentation of the Swedish Telecottages', 1994.10 \*

그녀와 토론을 가진 결과 스웨덴의 Telecottage도 우리의 초기 지역정보화 운동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첫째, 지방정부와의 협조관계로서 telecottage의 리더들이 telecottage의 가능성

기업에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 셋째, 광범위한 능력을 위한 telecottage의 자질향상 넷째, 농촌지역에서 새로운 고용기회 창출 등이다. 이 후 텔레카티지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국가를 중심으로 유럽 전지역과 브라질, 캐나다까지 전세계 240여 지역(1994년 초까지)으로 확산하게 되며 운영형태도 스웨덴과는 달리 학교시설을 이용하거나 지방정부의 공공보조를 받는 운영형태를 띠게 된다.<sup>2)</sup>

이어 유럽연합 차원에서 첨단정보통신서비스(ATIS)에 대한 접근수단의 결여로 인해 낙후지역이

유럽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뒤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5년간에 걸쳐 스타(STAR)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왔고 이어서 3년간의 텔레마티크 프로그램을 통하여 저개발 낙후지역을 개발시키는데 주력하여 왔다. 1994년 6월에는 우리에게 방계만 보고서(M. Banggemann Challenge)로 잘 알려진 EC위원회 권고안(Europe and global information society : 유럽과 세계의 정보화사회, 실행계획에서는 '정보화로 가는 유럽의 길'로 채택 '94.7)이 채택되어 유럽연합의 정보화사회 정책에 있어서 골격을 마련하게 되었다.

구분	시기	주요 내용	수혜(참여)지역	지원자금
Telecottage	1985년 스웨덴에서 최초 설립	정보통신서비스 및 교육을 통한 농촌지역의 경제활성화, 고용기회의 증진, 기업에의 정보서비스제공	유럽 및 브라질, 캐나다 237개 지역('94년 초)	자체수익 사업
STAR	1987-19991(5년)	역내 낙후지역의 경제개발을 목적으로 ISDN등 정보통신기반시설 마련에 중점지원(ISDN, 데이터통신, 이동통신, DB서비스, 사무자동화서비스등)	7개국 50개 지역	767Mecu (1ecu=1.2\$)
Telematique	1992-1994(3년)	STAR의 계속적인 수행으로 정보통신 수요촉진에 초점을 두고 중소기업의 첨단정보통신서비스 도입 및 개발에 중점지원	7개국 44개 지역	216 Mecu
Bangemann Challenge	1994. 7 유럽이사회에서 채택	'정보화로 가는 유럽의 길' 목표 법률적 기틀 마련등 4개과제와 재택근무, 원격교육 등 10개 응용사업과제 채택		

표 1.2 유럽의 정보화촉진 프로그램

성을 지방정부에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이는 지방정부가 telecottage의 역할에 대해 의심하고 있으며 이 지루한 논의는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며, 둘째, 당시만 해도 시골지역에서의 네트워크설비가 문제가 되었으며, 마지막으로는 경제적인 문제인데 '어떻게 하면 센터를 경제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이는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화두로 제기되는 것이기도 하다. 1989년 '지역사회의 발전'이라는 목표로 25개의 텔레카티지가 스웨덴 텔레카티지 협회를 설립하였으며 오늘날 거의 모든 텔레카티지는 100% 사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과 기업들에게 SW교육과 DTP사진복사, 팩스, 타이핑, 워드프로세싱, 번역, 컴퓨터 임대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1994. 10.)

2) Lars Qvortrup, 'Community TeleService Centers' 1994.10 \*

주) Lars Qvortrup 교수는 덴마크의 옌센에 있는 Odense University 교수이며 텔레카티지 협회의 부회장이다.

유럽을 비롯한 선진각국이 일찍부터 정보통신을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인식하고 정책을 추진해 온 것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후반부터 일부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지역정보화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 2. 국내의 지역정보화 흐름

우리나라의 지역정보화는 유럽의 텔레카티지 및 일본의 지역별 정보통신센터<sup>3)</sup>와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는 '지역정보센터'의 설립·운영과정에 따라 지역정보화의 흐름을 짚어 볼 수 있는데, 그 발전단계를 연구조사단계, 시범사업단계, 도입 및 활용단계, 정착 및 성숙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 연구조사단계('91 - '93)

연구조사단계는 80년대 후반, 전국적인 대국민 정보문화 확산 운동의 출발과 더불어 당시까지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된 정보화를 극복하고 이를 지방으로 확산하려는 정보통신부(구 체신부)의 정책과제에서 시도되었다. 즉, 지역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한 실천적 연구과제를 '91-'93년간에 걸쳐 전국의 각 지방대학에서 수행하여 이 시기에 98개의 지역정보화 관련 연구보고서가 개발되었다.

### 시범사업단계('93)

시범사업단계('93년)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적용

하고 시험할 '실험적 지역정보모형'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둔 '지역정보화 시범사업' 추진단계로서<sup>4)</sup>로서 전국 8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특성과 관련된 '지역정보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 사업은 중앙에서 지역을 대상으로 동시에 실시한 최초의 지역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자 향후 본격적인 실용화 사업을 위한 모델케이스 발굴 및 타당성 검증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 도입 및 활용단계('94 - '97)

시범사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개발된 시스템을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직체의 설립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 조직체가 바로 오늘날 '지역정보센터'의 출발점이 되었다. 지역정보센터는 지역정보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의 정보화거점기지로써 '94년부터 한국정보문화센터가 주축이 되어 설립에 착수하였다. 시·군의 생활권 단위지역을 중심으로 '94년 6월에 18개 지역정보센터가 설립되어 하이텔(Hinet-P)을 통하여 서비스되기 시작하였다. 하이텔의 초기화면에 '지역정보' 메뉴를 개설하고 전국의 지역정보센터를 연결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전국적인 지역정보를 서비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후 '95년에 12개, '96년에 7개, '97년에 8개의 지역정보센터가 추가적으로 설립되었다.

### 정착 및 성숙단계('98 - )

명확히 구분짓기는 어렵지만, '97년까지의 지역정보화사업이 중앙부처의 정책에 지역이 수동적으

3) 일본의 지역정보통신센터는 운영형태에 따라 1)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거나 2)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공사에서 운영하거나 3)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한 제3섹터방식에 의한 운영이거나 4)기타 운영방식 등으로 나눌 수 있다.

4) 신 광우, '지역정보센터의 환경변화와 성공요인 분석', 지역정보센터의 선택과 과제(충북대학교 지역정보화 세미나 자료, P.44), 1997.12

로 움직이는 추세였다면, '98년부터는 지역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역정보화의 필요성을 인식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자치단체별로 자체적인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사업과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서두르기 시작하였고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기 시작한 대규모의 정보화프로젝트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였다. 전액지원이 아닌 매칭펀드방식으로 수행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업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는 과거의 수동적인 면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정보화의 효용을 체득하고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고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정보화의 필요성에 대한 욕구와 사업추진의지를 볼 때 이제는 어느 정도 지역정보화 추진여건이 성숙되었다고 볼 수 있다.

### 3. 자치단체의 정보화 노력

서두에서 언급한 광역자치단체의 정보화 수준평가는 보는 시각에 따라 여러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정도까지라도 정보화수준을 끌어올린 것은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정보화의지와 노력에 기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단적인 예로 시·군·구를 포함한 전국의 248개 자치단체에서 홈페이지를 보유한 지자체는 97년도에 전체 27%에 해당하는 66개 지역에 불과하였으나 2년이 지난 '99년 5월 현재에는 77%에 달하는 191개 지역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는 자치단체에서의 정보화 추진이 상당히 빠르게 진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는 전 시·군·구가 모두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어 타지역 보다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

구 분	광역 및 시·군·구	홈페이지 구축지역		미구축지역 ('99.5월)	비고
		'97.8월	'99.5월		
서울	26	14 (54%)	26 (100%)	-	
부산	17	4 (24%)	11 (65%)	6	
대구	9	2 (22%)	6 (66%)	3	
인천	11	2 (18%)	9 (82%)	2	
광주	6	1 (17%)	4 (67%)	2	
대전	6	1 (17%)	4 (67%)	2	
울산	6	0 (0%)	2 (33%)	4	
경기	32	5 (16%)	32 (100%)	-	
강원	19	5 (26%)	14 (74%)	5	
충북	12	2 (17%)	8 (67%)	4	
충남	16	5 (31%)	9 (56%)	7	
전북	15	2 (13%)	11 (73%)	4	
전남	23	9 (39%)	20 (87%)	3	
경북	24	8 (33%)	18 (75%)	6	
경남	21	4 (19%)	14 (67%)	7	
제주	5	2 (40%)	3 (60%)	2	
계	248	66 (27%)	191 (77%)	57	

표 1.3 자치단체 홈페이지 구축현황

\* 행정자치부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

고 있다.(표 1.3 참조)

홈페이지의 기능도 정보제공위주인 일방향성에서 벗어나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게시판 기능을 가진 쌍방향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관련사이트를 연계시키거나 전자상거래 등을 추가하여 홈페이지의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사업은 행정업무전산화, 지역 공공 DB, 시정·도정정보, 지리정보, 지역중소기업정보, 지역토산품 전자시장, 원격교육 등 지역의 행정, 산업, 생활 전 분야에 걸쳐 있다.

자치단체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정보화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이 매우 중요한데 지방자치단체가 처음 지역정보화추진계획

을 수립한 것은 광주시의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한 도시종합시스템 구축계획」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sup>5)</sup> 이후 각 시·도에서 독자적인 지역정보화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96년부터는 거의 모든 광역자치단체와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기존의 행정전산화 이외에 지역의 산업과 문화, 생활 전반에 걸친 지역정보화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지역정보화 추진에 있어서도 다양한 방식이 도입되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시스템을 직접 개발, 운영하는 방식이었으나, 이제 민간기업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시·도 산하에 정보화추진 전담기관인 광역정보센터를 설립하기 시작하였다. 설립방식도 다양하여 직접투자 하거나 또는 주식회사 형태인 제3섹터 방식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지 역	사 업 명
서울	산업경제정보시스템구축
부산	부울가상대학원
인천	산업기술지역정보화모델
광주	광주미디어밸리조성
울산	산업기술지역정보화
경기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강원	대민행정정보시스템, 지역산품전자시장시스템 확대
충북	충북지역생산품유통시스템 확대
충남	사이버지역문화답사시스템구축, 사이버대학개설, 운영,* 전자상거래 기반조성
전북	민원행정정보시스템, 지역경제정보시스템
경북	농업정보센터 구축, 전자민원서비스'홈민원' 확대
경남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사이버평생교육시스템 구축* 도서관종합정보시스템
제주	관광종합정보시스템구축, 농축산종합정보시스템

표 1.4 광역자치단체별 주요 지역정보화사업

\* 지방자치단체의 '99 지역정보화추진시행계획(행정자치부)에서 인용

5) 전자신문사, '98정보통신연감, 1998.6

'98년 말까지 광역종합정보센터는 부산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도, 전라북도가 자체재원으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는 제3섹터방식으로 설립하였거나 설립할 계획이다. '99년도에는 강원, 충북, 충남, 경북이 설립할 계획이다.

PC통신을 이용한 서비스 또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서울시의 '민원처리안내'를 비롯해서 중구청의 '통신마당', 송파구청의 '소나무통신', 동대문구청의 '열린 마당' 등 서울시 각 구청이 PC서비스를 통해 각종 정보서비스 및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부산광역시청의 '부산시정소식', 대전광역시청의 '여론광장', 광주광역시청의 '빛고을 광주', 대구광역시청의 '대구교육행정', '대구시민 생활민원정보', 마산시와 진주시의 공중통신망(DNS)을 통한 '마산경제정보', 진주의 '진주시청민원정보' 전남의 '농어업방', 충북, 강원도의 관광정보, 등 광역.기초자치단체를 포함, 총 40개가 넘는 지역이 HiNET-P, 천리안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4. 지역정보화 발전방향

위에서 언급했듯이 지역정보화는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하고 산업사회에서 야기되었던 지역간의 문제, 즉 지역간 소득수준, 교육수준, 문화수준, 행정서비스수준 등의 격차를 극복하고 이를 대외경쟁력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핵심전략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서는 중앙의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사업이 실질적으로 밀접하게 연계되어야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중앙부처 차원에서는 예산지원과 법, 제도적인 여건조성,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등이 선행되어야 하고,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특성과 현실적 능력에 맞춰 이를 수용.추진함으로써 국가적으로 또 단위지역적으로 균형있는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추진되었던 지역정보화는 주로 중앙정부나 중앙공공기관 주도하에 추진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이유로 일부 지역정보화사업은 지역에서의 적극적인 호응이나 뒷받침을 얻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의 시행과 정보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한 '90년대 중.후반 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지역정보화의 주체로 나서기 시작하여 독자적으로 PC 통신서비스를 개시하거나 지역 특화시스템을 개발하여 서비스하기 시작하였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는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법,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95년 8월 4일 정보화촉진과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사업을 범국가적으로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이 중 지역정보화와 관련하여서는 동법 제5조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사항의 정보화촉진기본계획수립'을, 동법 제1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법적 추진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는 시, 도 지역정보화촉진표준조례(표준안)를 마련하여 시, 도에 시달한 바 있으며, 시, 도는 기존의 정보화 관련조례를 통폐합하여 신규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추진주체가 되어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는 과거 법적 근거의 미비로 인하여 예산조달 등 지역정보화를 추진하면서 겪었던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대다수의 광역시·도에서는 관련 추진조례가 거의 마련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시·군·구 단위에서는 관련조례의 마련이 미비한 실정이다.

둘째, 지역발전계획수립시 정보화계획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정보화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도입만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지역발전계획과 밀접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정보화는 기기의 도입뿐만 아니라 인력, 예산 등이 구체적인 계획하에 지원되어야 하며 정보시스템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기 위하여서는 지역개발과의 연계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발전계획 수립 시에 반드시 정보화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 국가개발계획과도 전략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분담 및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최근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은 자체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많이 있으나 상당부분은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으로 추진하고 있다. 과거에는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에 지시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나 요즘에는 지역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점차 바뀌어가고 있다. 지역정보화는 어디까지나 지역이 주체가 되어야 하며 중앙에서는 이를 위한 예산 및 기술을 지원하는 등 상호간의 역할분담과 이를 통한 밀접한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는 정보화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범, 선도 사업을 중점개발하고 이를 모델화시킴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개발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넷째, 지역간 특성있는 정보화추진과 이들 시스템간의 지역간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세계화, 국제화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지방화이며,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는 그 지역의 특성을 최대화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시스템 구축시에도 지역특성 및 현안을 감안하여 지역에 가장 잘 맞는 시스템설계가 되어야 한다. 또 한가지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지역의 특성화뿐만 아니라 특화된 지역정보시스템의 지역간 연계이다. 지역의 특화된 시스템을 지역간 연계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전 국가적인 하나의 지역정보망을 구축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광역단위에서 기초단위를 포괄할 수 있는 '기초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음단계로 국가단위에서 광역단위의 시스템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광역연계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하향식(Top-down)방식과 상향식(Bottom-up)방식 중 어느 것이 좋으냐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는데, 정보시스템의 특성상 지역정보는 가장 기본적인 IP(정보제공자)인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부터 출발하여야 하고 이를 내실화한 후에, 점차 인근 지역으로 범위를 확산·연계시키므로, 궁극적으로는 국가전체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시킬 수 있는 상향식(Bottom-up) 추진방식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이용자중심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지역정보화의 성공여부는 그것을 실제로 이용하는 이용자, 즉 지역주민의 참여여부에 달려 있다. 따라서 계획수립단계부터 지역주민의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추진과정에 있어서도 지역주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역주민 외에도 관련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산업체 등이 이용자로서 고려되어야 한다.

여섯째, 지역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의 정보산업 발전을 위하여서는 지역의 민간사업자가 사업추진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화는 특성상 높은 기술과 전문적인 인력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추진과정에서 대부분 대기업들이 주로 참여하게 되어, 사실상 자금, 인력, 기술이 열악한 지역정보산업체는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잃게 된다. 지역정보산업체의 육성을 위하여서라도 지방에서는 정책적으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실제로 시스템 개발 후에는 신속하고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역의 사업자가 참여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방향에 맞춰 지방자치단체 특히 시·군·구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내용으로서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전담조직의 설치, 정보화책임관의 설치, 지역정보화촉진조례의 제정,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구성 등이 있다.

#### 1)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지역정보화기본계획에는 명확한 비전의 제시가 있어야 하며 지역의 장기적인 정보화추진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 대상업무의 분류는 생활, 사회, 산업 등의 업무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반드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보화대상업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네트워크와 같은 인프라를 포함하고 교육, 홍보 등의 마인드 확산 방안도 수립되어야 한다.

#### 2) 전담조직의 설치

정보화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실, 과 단위의 조직이 있어야 하며, 조직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기술력을 확보한 전문인력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전담조직의 책임자를 가급적 전산전문가로 확보하는 것이 좋다.

#### 3) 정보화책임관(CIO)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보화 관련 업무의 조정, 통제, 지도, 감독 등의 권한과 역할이 강화된 CIO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CIO란, 조직의 정보기술 및 정보시스템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고위관리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정보기술의 활용, 정보자원의 관리에 대한 최고 책임자로서 조직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수립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CIO 제도의 도입방안으로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로, 자치단체의 시범적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시행한 후 단계적으로 전 자치단체에 확대 도입하는 방안이 있다. 둘째로 자치단체의 조직에 CIO 직제를 설치하고 정보담당 조직과 기능을 개편한다. 이에는 기획관리실에 CIO 기능을 부여하여 정보기획을 강화하거나 정보화업무의 총괄, 전담부서를 별도로 신설하여 CIO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 현행 정무부단체장을 정보화부단체장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sup>6)</sup>

#### 4) 지역정보화촉진조례의 조정

지역정보화촉진조례는 전산과 관련된 기존조례를 손질하여 통합하거나 신규로 제정하는 방법이 있다.

6) 김상욱, "지역정보화의 효율적 추진방안", 「지방자치발전 10대 과제(III) 공청회」 자료

### 5)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구성

지역정보화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정보화관련 계획을 심의, 조정, 의결하는 기능을 갖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는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의장으로 하고 지방의회의원, 유관기관 단체장, 대학교수, 민간기관 대표 등으로 구성한다.

## 5. 제 언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지역정보화의 현상과 추진 방안은 사실 그동안 다루어 왔던 일반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sup>7)</sup> 정보화의 구현에 있어서 한 차원 높은 시각에서 생각해야 하고 별도의 시각에서도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제안을 첨언한다.

### 1) 광역자치단체별 포털사이트 구축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보면 지역내 시,군,구의 정보와는 연계성이 미흡한 것을 알 수 있는데 대개가 연계링크를 이용하거나 사이트 맵에서 시,군,구와 접속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역의 종합적인 정보를 서비스한다는 측면에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감할 수 없기 때문에 실용적이고 살아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분야별로 지역내 DB를 검색하고 제공해 줄 수 있는 지역내 관문역할인 포털사이트(Portal site)의 구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행사정보나 입찰정보를 검색하면 시,도청 뿐만 아니라 시,군,구까지도 망라하는 정보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검색엔진을 개선하거나 새로이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시,군,구 DB체계를 정비하고 정기적인 모임을 통하여 지역의 'Total Service Cent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 자치단체별 "정보화 10대 시스템" 구축 목표설정

자치단체의 정보화기본계획을 살펴보면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이 나열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거의 외부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내부직원 참여율이 38%정도에 지나지 않음), 그 기간도 단기간(보통 6개월)에 걸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역의 실정과 능력이 무시된 채 작성된 것이 사실이다. 면밀한 계획과 검토하에 만들어져야 할 기본계획이 맞춤형이 아닌 기성품을 골라 사 입는 모양이 되기 쉽상이다(예를 들어, 우리는 유럽의 각종 보고서에서 그들의 준비과정에 대한 열정을 자료를 통해서 얼마든지 엿볼 수 있다). 때문에 다시 한번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지역의 '정보시스템 Top 10'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목표시스템 설정은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맞아야 하며 인프라 구축계획과 예산 뒷받침도 철저히 검토되어야 한다.

### 3) 주민과 지역소기업을 위한 web hosting 서비스 제공

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한 봉사의 주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하여 자치단체에서 직접 나서서 주민이나 열악한 환경의 소기업을 대상으로 web hosting

7) 여기서 '이제는'이라는 의미는 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의 홈페이지도 구축되어 있고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보화 프로젝트에도 많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정보화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갖추어진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견 홈페이지는 인터넷 열풍이라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떠밀려서 구축된 감도 있으며(형식적인 자료로 가득차서 주민이 외면할 수 있는), 정부지원 프로젝트도 지역의 체계적인 정보화목표와는 순서에 맞지 않는(시급한 시스템이 아닐 수도 있는) 시스템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제는' 새로운 시각에서 정보화 목표를 설정하고 구현하여야 된다는 것을 말한다.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서비스는 주민 입장에서 보면 관청의 사무실을 자기에게 무상으로 빌려주고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기 때문에 주민을 우호적 협력자로 만드는데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 4) 시범적 원격근무의 도입(과감한 혁신)

원격근무란 컴퓨터와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사무공간의 이동과 근무형태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운송국을 비롯한 주정부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96년 현재 30여개의 원격근무센터가 운영중에 있다. 일본에서도 중앙부처인 우정성이 '97.10월 부터 국가공무원을 시작으로 시범실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형 텔레워크센터도 아오모리현 등 22개 현과 33개 시에서 운영중에 있다. 그러나 대면문화에 젖어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원격근무가 도입되기 힘든 실정이며 특히 원격근무자는 조직에서 뒤쳐지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시행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정보화가 일상생활에서 뚜렷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그리고 변화된 생활형태를 널리 홍보하고 정보화에 대한 가속화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시범적인 원격근무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신 광 우

(학)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박사과정  
(경) LG 화학 전산실  
현재 한국정보문화센터 사업개발부 부장  
\*주관심분야 : 지역정보화, 컴퓨터 시뮬레이션  
(저서) 지역정보화 개론(공저)



최 두 진

(학) 서울대학교 신문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신문학과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박사과정 수료  
(경) 한국정보문화센터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  
현재 한국정보문화센터 사업개발부 과장  
\*주관심분야 : 정보문화정책, 정보화와 언론정보화 교육